

大學을 개방합시다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민정부에 걸맞은 교육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되기 위해서도 이 논의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난마와도 같이 얽힌 교육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아서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문제는 오랫동안 쌓여진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시각에서 이해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적 시각이나 유럽쪽의 시각이 참고는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논의를 신문지상 등을 통해 보면 외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별 도움이 못되었다. 우리 역사와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해법을 찾는 상식선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문제의 핵심은 대학문앞에 와서 갑자기 병목현상(bottle-neck)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 모두 들어가게 되면 큰 일이나 날듯이 문을 좁혀놓고 '일렬종대'로 늘어서게 만들었다.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옆으로 나란히' 구호에 맞추어 늘어 섰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대학문전에서 좌절을 맛보고 3/4은 결국 '실패자', '들러리 인생'의 운명을 벗어날 도리가 없는 제도로 만들어 놓았다. 수많은 젊은이와 학부모가 이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 어린 아기가 나면서 바쁘게 각종 과외학습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요 문화다. 어떤 이들은 이 '교육열'을 병폐로, '과열'로 몰아 붙이지만 그것은 한뼘의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의 문이 열리지 않고 3/4의 실패자, 재수생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대학정원과 지방자수가 1:1이 된다는니, 국제경쟁력을 갖자던 대학의 수월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니, 교육제도를 복선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니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고등교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국민의 배울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한 데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꾸어 봤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 대학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이 나라에서 꿈을 키우고 배우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제도가 흡수하지 못하여 외국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책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할수록 量에서 質이 나온다. 소수정예를 키우는 것보다 우선 많은 量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젊은 인재들을 아끼고 보살피고 키울 수 있는 국민적 고등교육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江原大 總長 文 善 在

둘째로 고등교육의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대학을 완전개방하는 데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을 방 안에서, 네 벽에 갇힌 교실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대학개방이 불가능하다. 대학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한다는 생각에서 가정과 직장과 대학의 모든 시설과 현대사회가 개발한 모든 기재를 동원하여 교육의 통로를 다양화한다면 불과 80만 명 정도의 대학지망생들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지망생들이 취직을 못해 실업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교수인력은 충분히 확보된 나라가 아닌가? 발상의 일대전환이 어렵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아니라 TV 앞에서도, PC나 라디오나 통신수단이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현대적 기술과 지혜를 모아 가르치기로 마음먹는다면 안 될 것이 있겠는가? 교육열이 높은 것은 이 나라의 희망이다. 이 열정을 '교육입국'의 국민적 제도로 흡수해서 신한국 장조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 거대한 국민적 열망의 물줄기를 순리대로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책임이다.

셋째로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발상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맞지 않는다. 가난할수록 인재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을 百年之大計라 하지 않는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낭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에 산출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볼 때,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 GNP의 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당장에 실천되지 않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고 싶다.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차적으로는 훌륭한 교수인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박사학위를 가진 유능한 교수인력이 취직을 못해서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들여서 배운 선진 학문인가? 그들이 배운 학문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전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서 대학교수의 수는 태부족이다. 지금의 약 2배 정도(현재 약 3만 명)는 늘려야 겨우 후진성을 면할 처지에 있다.

우리 학부모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화이론이니, 인적 자본론이니, 수월성의 추구니 등등 여러 이론도 좋지만 상식에 입각한 정책의 입안으로 국민적인 '교육입국'의 열망을 흡수하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기대해 본다. 상식에 입각한 정책입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정책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획기적이고 거국적인 교육개혁의 구상을 기대해 본다. ■